

[www.kef.or.kr](http://www.kef.or.kr)

2024

e경제 · 경영정책

리포트

Korea Enterprises Federation  
Weekly Newsletter

## < contents >

- ▶ 경총, 「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」 보고서 발표 (1.21)
- ▶ 기획재정부, 현장 방문 플랫폼 「현장, 기재부가 갑니다」 신설 (1.4~)

### ◆ 경총, 「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」 보고서 발표 (1.21)

- 1월 21일 한국경영자총협회(회장 손경식, 이하 경총)가 발표한 「6대 국가 첨단전략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분석 및 시사점」에 따르면, '18년 대비 '22년 우리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\*의 수출시장 점유율이 크게 하락( $\Delta 25.5\%$ )해 경쟁국들과 순위가 역전된 것으로 나타남.

\* 6대 국가첨단전략산업(이하 '6대 산업')은 정부가 '23년 3월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'국가첨단산업 육성 전략'에서 언급된 ①반도체, ②디스플레이, ③이차전지, ④미래차, ⑤바이오, ⑥로봇을 의미

※ 수출시장 점유율이란 특정 국가의 수출이 세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, 해당 국가의 수출경쟁력을 측정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활용. 동 보고서는 미국 국제무역위원회(ITC) 통계를 활용하여 분석.

- ① **(6대 산업 수출액과 비중 감소)** '22년 우리 6대 산업 수출액은 총 1,860억 달러로 '18년 (1,884억 달러) 대비 1.2% 감소. 우리 전산업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31.1%('18년)에서 27.2%('22년)로 하락.

※ '22년 우리 수출에서 6대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(27.2%)은 주요 6개국 중 대만(48.1%) 다음으로 높아 6대 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여전히 경쟁국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남.

- ② **(우리나라 6대 산업 수출시장 점유율 크게 하락)** '18년 대비 '22년 우리 6대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8.4%에서 6.5%로 25.5%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. '22년 우리 6대 산업의 수출시장 점유율(6.5%)은 중국(14.1%), 독일(8.3%), 대만(8.1%), 미국(7.6%)보다 낮은 수준으로 집계.

- ③ **(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 하락, 디스플레이는 상승)** 우리 6대 산업 중 수출 규모가 가장 큰 반도체는 '18년 대비 '22년 수출시장 점유율이 13.0%에서 9.4%로 32.5% 하락한 것으로 집계. 동 기간 디스플레이 수출시장 점유율은 9.9%에서 10.3%로 4.8% 상승.

- **(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 현황 국제비교)** 우리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은 '18년 13.0%에서 '22년 9.4%로 하락( $\Delta 32.5\%$ )한 반면, 대만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동기간 11.2%에서 15.4%로 크게 상승(+32.2%)하며 우리와 대만 간 수출시장 점유율 순위가 역전\*.

\* '18년 → '22년 우리나라와 대만의 반도체 수출시장 점유율 순위(6개국 중 순위) 비교 :  
[한국] 13.0%( '18년, 2위) → 9.4%( '22년, 3위) [대만] 11.2%( '18년, 3위) → 15.4%( '22년, 2위)

- **(디스플레이 수출시장 점유율 현황 국제비교)** '22년 우리 디스플레이의 수출시장 점유율은 10.3%로 6개국 중 중국(24.5%) 다음으로 높았음. 우리 디스플레이 수출시장 점유율은 '18년 9.9%에서 '22년 10.3%로 상승(+4.8%)했으나, 독일(+36.5%), 대만(+29.0%), 미국(+25.9%)에 비해 상승률이 낮게 나타남\*.

\* '18 → '22년 디스플레이 수출시장 점유율의 변화율 : 독일(+36.5%) > 대만(+29.0%) > 미국(+25.9%) > 한국(+4.8%) > 일본(△7.3%) > 중국(△21.2%) 順

## ◆ 기획재정부, 현장 방문 플랫폼 「현장, 기재부가 갑니다」 신설 (1.4~)

- 기획재정부는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고 기업의 애로사항 등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4년 1월 4일 기재부 홈페이지에 현장 방문 플랫폼인 「현장, 기재부가 갑니다」를 신설하여 운영 중

※ 이에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, 정부 정책에 대한 기업의 의견 전달 등을 위해 기재부의 현장 방문을 희망하는 경충 회원사분들께서는 동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.

### < 현장, 기재부가 갑니다 >

- (신청 대상) 기업 애로사항 해소·완화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의 현장 방문을 원하는 모든 기업
  - (신청 방법) 신청서 양식을 내려받은 후 신청자, 연락처, 방문장소, 신청사유 등을 자유롭게 기재하여 아래 전자우편 주소로 발송
    - ▶ 현장방문 신청·접수 전자우편 : moefvisit@korea.kr
- ※ 「현장, 기재부가 갑니다」 접속 링크 :  
<https://www.moef.go.kr/com/stf/moefVisit.do?menuNo=8170600>

문의 : 경제분석팀(02-3270-7376)

## < contents >

- ▶ 한국은행, 「2023년 4/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(속보)」 발표 (1.25)
- ▶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」 개최 (1.24)
- ▶ 한국은행, 「202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1.23)
- ▶ 한국은행, 「2024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」 발표 (1.25)
- ▶ 한국은행, 「2024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1.24)

### ◆ 한국은행, 「2023년 4/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(속보)」 발표 (1.25)

○ 2023년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년대비 1.4% 증가

※ 2023년 연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2023년 11월 전망치(1.4%)에 부합

※ 최근 5년('19~'23)간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('19~'21 확정치, '22 잠정치, '23 속보치)  
: 2.2%('19)→ △0.7%('20)→ 4.3%('21)→ 2.6%('22)→ 1.4%('23)

- 지출항목별로 건설투자(1.4%)와 설비투자(0.5%)가 증가 전환하였으나, 민간소비(1.8%)\*, 정부 소비(1.3%)\*\*, 수출(2.8%) 및 수입(3.0%)은 증가 폭이 축소

※ 연간 지출항목별 성장률 추이('22 잠정치, '23 속보치)

[민간소비]	4.1%('22)→ 1.8%('23)	[정부소비]	4.0%('22)→ 1.3%('23)
[건설투자]	△2.8%('22)→ 1.4%('23)	[설비투자]	△0.9%('22)→ 0.5%('23)
[수출]	3.4%('22)→ 2.8%('23)	[수입]	3.5%('22)→ 3.0%('23)

\* '23년 민간소비(1.8%)는 '13년(1.7%) 이후 11년 만에 최저치

\*\* '23년 정부소비(1.3%)는 '00년(0.7%) 이후 24년 만에 최저치

- 지출주체별 성장기여도는 민간 0.9%p, 정부 0.4%p로 나타남.

○ 2023년 4/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(GDP)은 전기대비 0.6% 증가(전년동기대비 2.2% 증가)

- 지출항목별로 민간소비(0.2%), 정부소비(0.4%), 설비투자(3.0%)\*와 수출(2.6%)이 모두 전기대비 증가했으나, 건설투자(△4.2%)\*\*는 전기대비 감소



\* '23년 4분기 설비투자(3.0%)는 '22년 3분기(7.0%) 이후 1년 1개 분기 만에 최대 증가 폭 기록  
 \*\* '23년 4분기 건설투자(△4.2%)는 '12년 1분기(△4.3%) 이후 11년 3개 분기 만에 최대 감소 폭 기록

◆ 산업통상자원부, 「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」 개최 (1.24)

- 산업통상자원부는 1월 24일 「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」를 개최하고, 2024년 역대 최대 수출 실적 달성을 위해 각 시장별로 설정한 수출 목표와 시장 진출 전략을 점검
- 「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」 발표자료에 따르면, 정부는 2024년 수출 목표를 7,010억달러 (전년대비 10.8% 증가)로 설정하고 10대 세계시장별 수출목표 및 진출 전략을 수립

〈 2024년 10대 세계시장별 수출목표 및 진출전략 〉

구분	시장	2024년 수출목표	진출전략 및 유망품목
주력시장	북미	1,387억달러(10.7% 증가)	공급망 재편의 핵심파트너 위치 선점 *품목 : 전기차배터리, 반도체, 첨단산업 등
	중국	1,878억달러(10.3% 증가)	산업수요 세분화, 新소비 트렌드 공략 *품목 : 조선 기자재, 간편식품, 의료용 기기 등
	아세안	1,540억달러(12.8% 증가)	역내 밸류체인(RVC) 진입, 한류 영향력 활용 *품목 : 간편식품, 전기차충전시설, 태양광패널, ESS 등
전략시장	EU	850억달러(11.0% 증가)	공급망 재편, 탄소 중립 기회 선점, 방산수요 공략 *품목 : 자동차, 반도체, 의료기기
	중동	300억달러(7.9% 증가)	경제협력 확대 연계 수출·수주 지원 강화 *품목 : 수소에너지, 폐기물에너지 산업, 재난복구 인프라
	일본	310억달러(6.9% 증가)	디지털 전환, 탄소중립 신규 투자 확대 활용 *품목 : 스마트팩토리, 전기차전장부품, 재생에너지
	서남아	235억달러(13.0% 증가)	글로벌 투자 확대, 중산층 수요 증가 *품목 : 일반기계, 화장품·식품, 전기차 부품
신흥시장	중남미	264억달러(10.9% 증가)	니어쇼어링 기회를 활용한 진출 확대 *품목 : 자동차 부품, 화장품, 의료·제약
	CIS	145억달러(9.0% 증가)	지정학적 불확실성에 따른 역내공급망 재편 대응 *품목 : 자동차 부품, 스마트팜, 드론, 신재생에너지
	아프리카	101억달러(11.0% 증가)	신시장 개척을 위한 신규거래선 집중 발굴 *품목 : 의료기기·의약품, 자동차중고차, 에너지기자재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 「2024년 세계시장 전략회의」 보도자료('24. 1. 24)

◆ 한국은행, 「202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(잠정)」 발표 (1.23)

- 2023년 12월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(△0.4%) 등이 내렸으나 농림수산물(4.9%), 서비스 (0.2%) 등이 올라 전월대비 0.1% 상승(전년동월대비 1.2% 상승)
  - ※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(% , 전월비) : 0.9('23.8)→ 0.5(9)→ △0.1(10)→ △0.4(11)→ 0.1(12)
  - ※ 생산자물가지수 상승률 추이(% , 전년동월비) : 1.0('23.8)→ 1.4(9)→ 0.7(10)→ 0.6(11)→ 1.2(12)
- (농림수산물) 축산물(△2.7%)이 내렸으나 농산물(9.3%), 수산물(4.6%)이 올라 전월대비 4.9% 상승(전년동월대비 6.4% 상승)

- **(공산품)** 컴퓨터·전자 및 광학기기(0.2%) 등이 올랐으나 석탄 및 석유제품( $\Delta$ 3.7%), 화학제품( $\Delta$ 0.7%) 등이 내려 전월대비 0.4% 하락(전년동월대비 0.4% 하락)
  - **(전력, 가스, 수도 및 폐기물)** 산업용도시가스(6.7%) 등이 올라 전월대비 1.0% 상승(전년동월대비 4.6% 상승)
  - **(서비스)**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(0.5%), 금융 및 보험서비스(0.8%) 등이 올라 전월대비 0.2% 상승(전년동월대비 2.2% 상승)
- 2023년 연간 생산자물가지수는 공산품( $\Delta$ 0.9%)이 하락했으나, 전력·가스·수도 및 폐기물(16.1%), 서비스(2.5%), 농림수산물(2.9%)이 올라 전년대비 1.6% 상승
- 2023년 12월 국내공급물가지수\*는 전월대비 0.2% 하락(전년동월대비 0.1% 하락), 총산출물가지수\*\*는 전월대비 0.1% 하락(전년동월대비 0.4% 상승)
- \* 국내에 공급(국내출하 및 수입)되는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
- \*\* 국내생산품의 전반적인 가격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국내출하 외에 수출을 포함하는 총산출 기준으로 상품 및 서비스의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지수
- 2023년 연간 국내공급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.7% 하락, 2023년 총산출물가지수는 전년대비 0.6% 하락

### ◆ 한국은행, 「2024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(BSI)」 발표 (1.25)

- 2024년 1월 업황BSI는 69\*로 전월대비 1p 하락하였으나, 2024년 2월 업황전망BSI는 69로 전월대비 1p 상승
- \* 업황BSI 추이 : 73(\*23.9)→ 70(10)→ 70(11)→ 70(12)→ 69(\*24.1)
- **(제조업)** 2024년 1월 업황BSI는 71\*로 전월에 비해 1p 상승하였으며, 2024년 2월 업황전망BSI는 71로 전월에 비해 2p 상승
  - \* 제조업 업황BSI 추이 : 68(\*23.9)→ 69(10)→ 70(11)→ 70(12)→ 71(\*24.1)
  - **(비제조업)** 2024년 1월 업황BSI는 67\*로 전월에 비해 3p 하락하였으나, 2024년 2월 업황전망BSI는 68로 전월과 동일
  - \* 비제조업 업황BSI 추이 : 77(\*23.9)→ 71(10)→ 69(11)→ 70(12)→ 67(\*24.1)

### ◆ 한국은행, 「2024년 1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」 발표 (1.24)

- **(소비자심리지수)**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(CCSI)\*는 1월중 101.6으로 전월(99.7)대비 1.9p 상승
- \* 소비자심리지수(CCSI) : 소비자동향지수(CSI) 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하여 산출한 심리지표로서 장기평균치

(2003년 1월~2022년 12월)를 기준값 100으로 하여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,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의미

※ 소비자심리지수(CCSI) 추이 : 99.8('23.9)→ 98.2(10)→ 97.3(11)→ 99.7(12)→ 101.6('24.1)

- 가계의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나타내는 현재경기판단CSI(89)는 전월대비 1p 상승, 향후경기전망CSI(81)는 전월대비 4p 상승
- 물가수준전망CSI(143)는 전월대비 3p 하락, 임금수준전망CSI(117)는 전월대비 1p 상승

○ **(기대인플레이션)**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월 3.0%로 전월대비 0.2%p 하락

※ 기대인플레이션율 추이(%) : 3.3('23.9)→ 3.4(10)→ 3.4(11)→ 3.2(12)→ 3.0('24.1)

-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공공요금(65.3%), 농축수산물(45.9%), 개인서비스(24.6%) 등 順

○ **(물가인식)** 지난 1년간 주관적으로 체감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의미하는 '물가인식'은 1월 3.8%로 전월대비 0.1%p 하락

※ 물가인식 추이(%) : 4.1('23.9)→ 4.1(10)→ 4.1(11)→ 3.9(12)→ 3.8('24.1)

문의 : 노사협력팀(02-3270-7417)

## < contents >

- ▶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
- ▶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
- ▶ 고용부는 「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」 발표
- ▶ 민주노총은 올해 정권 퇴진 투쟁, 총선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주력한다는 방침
- ▶ 임금교섭 타결현황

### ◆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관련 행정해석을 변경하고 사회적 대화를 통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추진

○ 고용부는 1. 22 연장근로 한도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을 반영해 기존 행정해석 변경

※ 대법원은 지난 12. 7 1주간 12시간의 연장 근로한도 위반 여부에 대해 1일 8시간을 초과한 시간을 합산하는 것이 아니라, 1주를 합산한 실근로시간이 1주 52시간(40+12시간)을 초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

- 고용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장 노사 및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행정해석을 변경한 것이며, 현재 조사 또는 감독 중인 사건에 바로 적용된다고 발표

#### [참고] 연장근로 한도 위반 관련 고용부 행정해석

구분	변경 전	변경 후
연장근로 한도 위반	1주 총 근로시간이 52시간 이내이더라도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	1주 총 근로시간 중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이



	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	연장근로이며 이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하면 법 위반에 해당
연장근로 수당 지급	■ 1주 40시간,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50% 이상 가산	

- 또한, 고용부가 금번 행정해석 변경과 함께 근로시간 제도 개편 관련 사회적 대화 추진 입장을 재차 피력한 가운데 한국노총은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관련 이견 표출
  - 고용부는 연장근로 한도 위반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해 노사 모두 이견이 있었던 만큼 사회적 대화를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근로자 건강권 보호 등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
  - 반면, 한국노총은 금번 행정해석 변경에 대해 연장근로 몰아쓰기 등 장시간 근로가 유발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▲1일 근로시간 상한, ▲근로일간 11시간 이상의 연속 휴식권 도입의 법제화 요구

#### ◆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상정 무산

-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 개정안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1. 25 국회 본회의에 미상정
  - ※ 중대재해처벌법은 1. 27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예정
  - ※ 더불어민주당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의 전제로 ① 법률 확대 적용 준비 미흡에 대한 정부의 사과, ② 유예기간 동안 안전확보 계획 제시, ③ 2년 유예 이후 법률을 시행한다는 정부·경제단체 등의 약속, ④ 산업안전보건청의 연내 설치를 제시해왔음.
- 대부분의 50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사업장 폐업 및 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의 현실화 우려
  - ※ 경총이 지난해 12. 10 상시근로자 50인(건설업 : 공사금액 50억) 미만 1,053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94%가 ‘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가 완료되지 않았다’고 답변

#### ◆ 고용부는 「2022년 노동조합 조직현황」 발표

-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노조 조직률은 13.1%로 전년대비 1.1%p 감소했고, 조합원 수는 약 272만명으로 전년대비 약 21만명 감소
  - ※ 2021년 노조 조직률 : 14.2% / 2021년 노조 조합원 수 : 약 293만명

- 고용부는 노조 조직률 및 조합원 수 감소의 주요 원인을 ① 정확한 통계 작성을 위한 오류 수정, ② 건설부문에서의 조합원 감소(약 14만명)로 판단
  - 고용부는 장기간 활동을 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 노동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산하고, 사업장 폐업 여부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실체가 없는 노조도 목록에서 삭제
- 한편, 양 노총 조합원 수가 전년대비 감소한 가운데 노조 조직률은 근로자수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높게 나타남.

[참고]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주요 내용

구분	주요 내용
<b>상급단체별 조합원 수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한국노총 : 112만1천명(전년대비 11만6천명 감소)</li> <li>■ 민주노총 : 109만9천명(전년대비 11만2천명 감소)</li> <li>■ 미가맹(상급단체 없음) : 48만2천명(전년대비 5천5백명 증가)</li> </ul>
<b>부문별 노조 조직률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민간부문 : 10.1%(전년대비 1.1%p 감소)</li> <li>■ 공공부문 : 70%(전년과 동일)</li> </ul>
<b>사업장 규모별 노조 조직률</b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근로자 수 300명 이상 : 36.9%(전년대비 9.4%p 감소)</li> <li>■ 근로자 수 100~299명 : 5.7%(전년대비 4.7%p 감소)</li> <li>■ 근로자 수 30~99명 : 1.3%(전년대비 0.3%p 감소)</li> <li>■ 근로자 수 30명 미만 : 0.1%(전년대비 0.1%p 감소)</li> </ul>

- 특히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이 추진된 2017~2019년에 집중적으로 증가했으며, 일부 공공기관들은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화 진행

※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 : 63.2%(2017)→68.4%(2018)→70.5%(2019)

- 최근에도 공공부문에서는 공공기관 자회사 노조가 모회사를 상대로 직접고용,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등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
  - 도로교통공단의 자회사인 도로교통안전관리 노조는 ▲대표이사 퇴진, ▲식대 인상, ▲복리후생비 신설 등을 요구하며 지난 1. 10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
  - 도로교통안전관리 노조는 사태 해결을 위해 모회사인 도로교통공단의 개입을 요구하고 있어 교섭 난항 지속

## ◆ 민주노총은 올해 정권 퇴진 투쟁, 총선을 통한 정치세력화에 주력한다는 방침

- 민주노총은 1. 23 신년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올해 주요 사업계획 및 투쟁 계획 발표
  - ※ 민주노총은 2. 5 「정기대의원대회」에서 2024년 사업계획 확정 예정

- 민주노총은 올해 사업 기조를 ① 정권 퇴진, ② 총선승리를 통한 정치세력화, ③ 모든 노동자의 노동권 쟁취 등으로 결정

[참고] 민주노총 2024년 주요 투쟁계획

구분	주요 내용
총선투쟁 (1월~4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정권 심판·총선승리 투쟁선포대회(2. 24)</li> <li>민주노총 총선요구안 발표</li> <li>정권 심판 민중대회(3. 9)</li> </ul>
의제관철 투쟁 (5월~8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전국노동자대회(5. 1)</li> <li>총선 요구안 입법 투쟁(6월~)</li> <li>초기업교섭 촉구 결의대회(6. 1)</li> <li>최저임금 인상 전국노동자대회(6. 22)</li> </ul>
입법·제도화 투쟁 (9월~12월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거부권 법안 재입법 민중대회 추진</li> <li>전국노동자대회(11. 9)</li> <li>공공성 강화 입법, 예산 확보 투쟁</li> </ul>

- 또한 민주노총은 ▲노조법 제2·3조 재입법 추진, ▲최저임금 인상, ▲초기업교섭 제도화 등을 위한 집회 중심의 투쟁을 계획

◆ 임금교섭 타결현황

고용노동부 발표, 임금결정현황조사 결과
<p>※ 협약임금 인상률*은 고용부가 100인 이상 사업체 10,232개를 대상으로 집계, 2023년도 1~11월 임금결정현황 제출 사업체는 5,487개(53.6%)</p> <p>* 노사 협약으로 정한 사전적 임금(정액급여, 고정상여금 기준) 인상률</p> <p>※ 2023년 1~11월 누계 협약임금 인상률 (임금총액 기준, 잠정치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전체) 4.5%, 전년동기 5.0% 대비 0.5%p 하락</li> <li>- (규모별) 100~299인 4.7% (전년동기 5.1%), 300인 이상 4.5% (전년동기 4.9%)</li> <li>* 1,000인 이상 4.4% (전년동기 4.9%)</li> </ul>

< 개별기업 임금교섭 타결현황 >

(2023. 1. 24 현재)

번호	업 체 명	업종	일시	상급단체	내 용
10	하나은행	서비스	1.19	한국노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'23년) 임단협 타결</li> <li>· 임금 2.0% 인상</li> <li>· 이익연동 특별성과급(기본급의 280%) 지급 등</li> </ul>

9	우리은행	서비스	1.10	한국노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'23년) 임단협 타결</li> <li>· 임금 2.0% 인상</li> <li>· 사기진작 명목 일시금 200만원 지급</li> <li>· 개인연금 지원 금액 상향 조정(10만원→20만원)</li> <li>· 본인 결혼 축하금 150만원 지급 등</li> </ul>
8	KB국민은행	서비스	1.5	한국노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'23년) 임단협 타결</li> <li>· 임금 2.0% 인상</li> <li>· 성과급 230% 지급 등</li> </ul>
7	BC카드	서비스	12.12	민주노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'23년) 임단협 타결</li> <li>· 임금 1.72% 인상(자동상승분 포함 시 약 3.7%)</li> <li>· 연봉 80% 수준의 특별 사기 진작금 및 임단협 조기타결 축하금 지급 등</li> </ul>
6	CJ제일제당	제조	11.23	한국노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'23년) 임단협 타결</li> <li>· 1년 차 신입사원 임금 7.1% 인상. 2년 차 이상 직원은 고과 등급별 임금 인상을 소폭 인상 등</li> </ul>
5	포스코	제조	11.13	한국노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'23년) 임단협 타결</li> <li>· 기본급 10만원 인상</li> <li>· 주식 400만원 지급</li> <li>· 일시금 250만원 지급</li> <li>· 지역상품권 50만원 지급</li> <li>· 격주 4일 근무제도 도입 등</li> </ul>
4	고려아연	제조	11.2	한국노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'23년) 임단협 타결</li> <li>· 기본급 11만 8,000원 인상(승급분 제외)</li> <li>· 타결 일시금 290만원 지급 등</li> </ul>
3	한국타이어	제조	10.31	한국노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'23년) 임단협 타결</li> <li>· 기본급 4.0% 인상(정기 호봉승급분 포함)</li> <li>· 안전생산 장려금 200만원 지급</li> <li>· 복지카드 60만원 지급 등</li> </ul>
2	기아	제조	10.23	민주노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'23년) 임단협 타결</li> <li>· 기본급 11만 1,000원 인상(호봉승급분 포함)</li> <li>· 경영성과금 300%+800만원 지급</li> <li>· 생산판매목표 달성 격려금 100% 지급</li> <li>· 특별 격려금 250만원 지급</li> <li>· 재래시장 상품권 25만원 지급</li> <li>· 무분규 타결 무상주 34주 지급 등</li> </ul>
1	KT	서비스	10.13	한국노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▶ ('23년) 임단협 타결</li> <li>· 직원 1인당 평균 연 235만 5,000원 인상(기본급 154만원, 평균 3% 수준)</li> <li>· 격려금 500만원 지급</li> <li>· 업무용 단말기 구입비 100만원 지급</li> <li>· 총량자율근무제 기준 근로시간 단위를 '기존 주 40시간, 1주 단위 선택'에서 '월(4주) 160시간, 월 단위 선택'으로 변경 등</li> </ul>

문의 : 노사관계법제팀(02-3270-7321), 의정협력팀(02-3270-7382)

## < contents >

### ○ 국회동향

- ▶ 경총, ‘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성명 발표’ 기자회견(1.23)

### ○ 판례동향

- ▶ 원청 사용주의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 판단(인정) ; 서울고법 2024. 1. 24. 선고, 2023누34646 판결

### ○ 국회동향

- ◆ 경총, ‘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성명 발표’ 기자회견 (1.23)

- 경총 등 경제5단체와 홍석준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,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차법 시행(1.27)을 앞둔 상황에서 개정안(유예기간 연장)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

- 경영계는 이번에 법 적용 유예기간이 연장될 경우 향후에는 추가 유예를 요청하지 않을 것을 약속 했음에도 불구하고,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
- 경영계는 중차법의 근본 목적이 ‘산재 예방을 통한 중대재해 감축’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, 이대로 법 이 시행될 경우 소규모 사업장 폐업·근로자 실직 등 부작용만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표명

- 한편 개정안은 법 시행 전 마지막 법사위 전체회의(1.24)에서도 야당의 반대로 인해 미상정



## ○ 판례동향

### ◆ 원청 사용주의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에 대한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에서의 사용자 지위 판단(인정) ; 서울고법 2024. 1. 24. 선고, 2023누34646 판결

노동조합법 제81조 제1항 제3호의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된다.

<p><b>사실관계</b></p>	<p>○ A사는 상시 5,500명을 사용해 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며, 이 사건 노동조합은 택배 관련 모든 노동자 대상으로 조직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으로, A사 167개 집배점 소속 택배기사를 포함한 1,200명의 택배기사들이 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음.</p> <p>○ 이 사건 노동조합은 A사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고, A사는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함.</p> <p>- ① <u>서브터미널에서 배송상품 인수시간 단축</u>, ② <u>서브터미널에서 집화상품 인도시간 단축</u>, ③ <u>서브터미널 작업환경 개선(택배기사 1인당 1주차 보장, 우천시 상품 보호 시설 설치)</u>, ④ <u>주5일제 실시</u>, ⑤ <u>급지수수료 인상·개선</u>, ⑥ <u>사고부책 개선</u> 의제를 요구함.</p> <p>○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신청을 제기함.</p> <table border="1" data-bbox="411 1227 1390 1805"> <thead> <tr> <th data-bbox="411 1227 903 1279">서울지방노동위원회 - 각하</th><th data-bbox="903 1227 1390 1279">중앙노동위원회 - 인용</th>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data-bbox="411 1279 903 1805"> <p>• A사와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<u>명시적·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</u>, A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‘사용자’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음.</p> </td><td data-bbox="903 1279 1390 1805"> <p>•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노무제공계약을 직접 체결한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<u>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</u>로 인정함.</p> <p>•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<u>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, A사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단독 내지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</u>.</p> </td></tr> </tbody> </table> <p>○ A사는 서울행정법원에 해당 중노위 재심판정 취소의 소를 제기했으나, 1심 법원은 <u>A사는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이며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할 정당한 이유에 대해 아무런 주장·증명을 하지 않으므로 단체교섭 거부·해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</u>며 청구를 기각함.</p>	서울지방노동위원회 - 각하	중앙노동위원회 - 인용	<p>• A사와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<u>명시적·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</u>, A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‘사용자’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음.</p>	<p>•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노무제공계약을 직접 체결한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<u>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</u>로 인정함.</p> <p>•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<u>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, A사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단독 내지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</u>.</p>
서울지방노동위원회 - 각하	중앙노동위원회 - 인용				
<p>• A사와 대리점 택배기사와의 <u>명시적·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</u>, A사는 노동조합법 제2조제2호에서 정한 사업주인 ‘사용자’에 해당하지 않아 당사자 적격이 없음.</p>	<p>• 근로자와 사용종속적 노무제공계약을 직접 체결한 원사업주가 아닌 사업주라 할지라도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<u>일정 부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</u>로 인정함.</p> <p>•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사실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<u>단체교섭 거부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, A사는 노사의 자율적 선택에 따라 단독 내지 대리점주와 공동으로 이 사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함</u>.</p>				

판결요지	<p>■ 관련 법리</p>
	<p>대법원 2010. 3. 25. 선고, 2007두8881 판결 참조</p>
	<p>•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,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였다면, 그 시정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이행하여야 할 사용자에게 해당한다.</p> <hr/> <p>■ 판결 요지 - 1심 판결 인용</p> <p>○ (사용자 개념 확대) 단체교섭 거부·해태 부당노동행위의 사용자에는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 및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근로조건 등을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·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포함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부당노동행위제도의 취지는 헌법이 규정하는 근로3권을 구체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단결권과 관련된 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(제4호)뿐 아니라 단체교섭권과 관련된 거부·해태의 부당노동행위(제3호)에도 마찬가지로 규정됨.</li> <li>- 근로계약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와 집단적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하는 사용자는 그 기능과 법률관계를 달리하는 사용자이며, 현실적인 근로계약의 당사자인가 여부로서 사용자 개념의 기준을 도출해야 한다고 볼 수 없음.</li> <li>-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에 조응해, 사용자 여부 또한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근로3권을 침해할 수 있는 권한·지위에 있는지 관점에서 파악해야 함.</li> <li>- 헌법은 근로3권 중 중심적 지위를 갖는 단체교섭권을 실효성 있게 보장하기 위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할 의무를 부과함.</li> <li>- 헌법이 단체교섭권 등 근로3권 보장이 궁극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개별적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여야 한다는 결론이 당연 도출되는 것은 아님.</li> <li>- 단체교섭권은 단체협약체결권과 별도로 그 자체로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권리로서 노동관계 당사자들이 근로조건 등에 대해 자율적인 교섭과 협의의 의사소통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단체협약의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교섭뿐 아니라 사실행위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체교섭도 있을 수 있음.</li> <li>- 이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성실히 교섭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지 않았다면, 노동조합의 요구사항</li> </ul>

	<p>을 수용하지 못한 결과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하였더라도 단체교섭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에서도 그러함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체교섭에 의해 체결된 단체협약이 취업규칙·근로계약에 대해 직접적·강행적 효력을 미치는 규범적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근거로 단체교섭이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에서만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귀결된다고 볼 수도 없음.</li> <li>-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사용자와의 사이에 체결한 협약자치의 결과물임을 존중하고, 근로3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업규칙·근로계약에 대한 우월적 효력을 인정한 것으로, 헌법상 근로3권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됨.</li> <li>- 사용자가 단체교섭 의무를 이행하더라도 반드시 그 내용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점에서도 사용자가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은 별개로서 구분되어야 함.</li> <li>- A사(원청 사업주)가 사용자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A의 구체적 의무는 노조와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는 것일 뿐 노조의 요구 내용대로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까지는 발생하는 것은 아니며,</li> <li>- 기존 원사용자인 집배점 단위에서 체결한 단체협약과는 교섭 대상의 범위가 다른 점 등에 비추어, A사와 이 사건 노조 사이의 단체교섭이 기존의 하청 노조 및 원 사용자 간 법률관계에 직접적 영향을 미쳐 당사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움.</li> <li>- 부당노동행위 규정의 취지를 더해 보면, 그로 인해 초래되는 A사의 기업활동의 자유 등의 제한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불성실한 단체교섭 금지라는 합리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의 기본권 제한에 그친 것으로 과도한 침해라고 볼 수 없음.</li> </ul> <p>○ (A사의 단체교섭 의무 인정) 이 사건 노동조합이 제기한 6가지 교섭 의제에 대해 A사는 집배점주와 중첩적인 지배·결정 권한을 가지며, 교섭의무가 있음.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제1 내지 2의제) 직·간선 터미널과 위탁 터미널을 운영하는 집배점은 각자의 명의로 협력업체와 직접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있다는 점만 다를 뿐, A사가 그에 상응하는 집배송수수료 및 상하차비용, 분류비용 등을 지원하여 실질적으로는 A사의 전국적 배송물류 시스템에 편입되어 운영됨.</li> <li>- 그 외 간선차량의 수, 출발 및 도착시간, 당일배송의무 여부, 집화물품 인도장소 등 배송상품 인수시간 및 집화상품 인도시간과 관련한 주요 요인들에 관해 직영 터미널과 동일하게 A사가 지배·결정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.</li> </ul>
--	--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A사가 집배점에 공통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상품에 대한 당일배송의무, 그러한 의무이행에 대한 CS평가, 서버터미널에 도착하는 일일 상품의 총수량(업무량) 및 마지막 상품이 도착하는 시간(작업 개시 시간), 서버터미널의 물적 설비 등은 A사가 지배·결정함.</li> <li>- <b>(제3의제)</b> 직간선 및 위탁 터미널은 A사의 경제적 이해에 따라 운영되는 형태로 A사의 전국적 배송물류시스템에 편입되어 있고, 각 서버터미널 유형의 일부 차이는 단체교섭 진행 과정에서 고려될 뿐 단체교섭 의무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아님.</li> <li>- <b>(제4의제)</b> 이 사건 부속계약서에 따라 주6일 근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집배점주와 택배기사 사이의 위수탁계약도 대부분 주6일제 근무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A사와 집배점주는 중첩적인 지배·결정 권한을 가짐.</li> <li>- <b>(제5의제)</b> 택배기사의 보수를 구성하는 다른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 보수의 주된 요소 중 하나인 배송수수료와 관련된 교섭 자체를 회피하는 근거가 될 수 없고, 일부 집배점에서 급지수수료와 다른 형태로 수수료를 측정하고 있다고 하여 배송수수료에 대한 A사의 지배·결정권한이 부정된다고 볼 수 없음.</li> <li>- <b>(제6의제)</b> 사고부책기준에 관해서도 A사와 집배점주가 중첩적인 지배·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음을 넘어 모든 집배점주가 사고부책 기준과 전혀 무관하게 A사로부터 독립적으로 택배기사와의 손해분담비율에 대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.</li> </ul>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b>시사점</b>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금번 판결은 원·하청의 다면적 계약관계에 있어, 원청의 하청 근로자들(집배점 택배기사)에 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고 교섭의 무가 있다고 판시했으나 법리 해석상 문제가 있음.</li> <li>- 대법원은 단체교섭상 사용자 지위에 관해 일관되게 명시적·묵시적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자임을 명확히하고 있음(대법원 2008. 9. 11. 선고, 2006다40935 판결).</li> <li>- 그러나 금번 판결은 ‘지배·개입의 부당노동행위’에 대한 사용자 지위에 관한 대법원 판결(대법원 2010. 3. 25. 선고, 2007두8881 판결)을 인용하여, 단체교섭상 사용자와 달리 볼 이유가 없다며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자 지위를 판단함.</li> <li>- 또한 법원은 헌법상 근로3권 보호가 궁극적으로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것임을 인정하면서도, 단체교섭권과 단체협약체결권을 별도의 권리로 보며 근로계약관계와 무관한 자를 당사자로 끌어들이고 교섭의무를 부과하여 노동조합법상 벌칙(제90조)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당한 결과를 수인케 함.</li> </ul>
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단체교섭은 노사간 자율적인 교섭과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이며, 그에 상응해 단체협약 체결이라는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타당함.</li> <li>○ 금번 판결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 등 현행 노동관계법 체제와도 충돌되며, 해당 판결로 산업현장은 하청노조의 원청기업에 대한 교섭 요구와 파업, '실질적 지배력' 유무에 대한 소송 등 소모적 분쟁을 동반한 혼란이 야기될까 우려됨.</li> <li>- 금번 판결 이후 양 노총은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어 폐기된 노동조합법 제2조·제3조 개정안(일명 '노란봉투법')의 정당성을 입증한 판결이라며, 해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재추진 입장을 밝힘.</li> <li>○ 향후 대법원에서는 산업현장의 현실을 살펴, 현행 대법원의 입장에 따라 단체교섭 상대방은 명시적·묵시적 근로계약 관계를 전제로 하여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판단할 것을 기대함.</li> </ul>
--	---